음식물류 폐기물

처리 방식별 비교(에너지 소모/비용)와

최적의 처리방향 제안



2016년 05월 23일

(주) 가 이 아



[목 차]

- 1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 개요
 - ╼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
 -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
 - (1) 현재의 처리 방식(수집 \rightarrow 운반 \rightarrow 중간처리장 \rightarrow 하폐수처리장/퇴비장)
 - (2) 건조 감량기의 처리 방식
- 2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별 에너지 소모량 비교
 - (1) 현재의 처리방식: 2,866kWh/톤(f/w) [=2,464,760kcal/톤(f/w)]
 - (2) 건조 감량방식: 850kWh/톤(f/w) [=731,000kcal/톤(f/w)]
- 3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별 처리비용 비교
 - (1) 현재의 처리방식: 200,000원~240,000원/톤(f/w) ※설비비 및 운영비 포함
 - (2) 건조 감량방식: 160,000원~200,000원/톤(f/w) ※설비비 및 운영비 포함
- 4.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
- 5. 최적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안 제안



음식쓰레기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나?



경제적인 재생자원화의 진실은?



1) 음식쓰레기 발생



- 쓰레기 발생량: 500만톤/년
- 버려지는 음식물 가치: 20조원/년
- 연간 처리비 : 1조원(톤당 20만원)

① 조리과정

• 8,000톤/일(약 60%)



• 5,500톤/일(약 40%)







13,500톤/일(연간 20조원 낭비)!

2) 처리 방식

- (1) 현재의 처리 방식(수집→운반→중간처리장→하폐수처리장/퇴비장)
 - ① 음식쓰레기 수거방식

일반 음식물쓰레기통



공동주택에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고 배출하 는 방식

종량제 봉투



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를 구입해 배출하는 방 식

납부친 • 스티커방식



배출자가 납부칩이나 스 티커를 구입한 뒤, 수거 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

RFID 계량방식



RFID 기술을 이용해 배 출자별로 쓰레기 무게를 자동 측정,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



② 음식쓰레기 처리방식



(2) 건조감량기의 처리 방식



음식물쓰레기 건조물을 "음식쓰레기 건조 연료"로 재사용!

2.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식별 에너지 소모량 비교

1) 에너지 소모량 계산의 근거

(1) 전기식 건조 감량 방식

-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전기식 건조 감량기로 처리할 경우의 에너지 소모량의 K-Mark 등 의무적인 검사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, 전기 에너지 소모량이 확실하게 명시됨.
- ② 즉 $85kWh/100kg \rightarrow 850kWh/E(f/w) = 731,000kcal/E(f/w)$ 임.

※ 첨부 1 : K-Mark 인증서

(2) 현재 처리 방식 (수집→운반→중간처리장→하폐수처리장/퇴비장)

- ① 현재의 음식물 자원화 협회가 중심이 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, 즉 수집/운반/ 파쇄/고형물과 탈리액 분리/퇴비장 또는 하수처리장 이동/비료화 및 폐수처리 방식 에서는, 많은 단계의 이송과정이 많고, 관리체계가 의무화되지 않아서 각 단계별 에 너지 소비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통계가 없음.(각 사의 비밀 사항)
- ② 그런데 2006년에 제정된 IPCC(기후변화 당사국 협의회)의 GHG 산출 guide line에 의하면 소모되는 에너지를 CO₂로 환산하고 있는바, 이는 주로 화석연료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모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CO₂를 계산하였음. 그러므로 IPCC G/L에 의해 환경부가 작성한 "음식물류 폐기물 물질흐름 단계별 온실

가스 배출량 산정표"(첨부2)에 의한 CO_2 발생량을 소비열량으로 환산하면 각 단계별에너지 소비량을 추산할 수 있음.

- ③ 또한 한국에너지 공단에서는 IPCC의 G/L에 의해서 연료별 CO_2 발생량을 환산하는 환산표(http:// CO_2 .kemco.or.kr/toe/toe.aspx)를 만들었으므로, 이를 근거(환경부 상기자료의 <그림 5-16>기준)로 에너지 소모량을 산출 할 수 있음.
 - 수집: 온실가스 배출 없음
 - 운반: 88.07kg(CO2)/톤.km
 - 중간처리시설: 16.1kg(CO2)/톤
 - • 하수처리장(음식쓰레기 총량의 65%): 244.7kg(CO2)/톤
 - 퇴비화 시설(음식쓰레기 총량의 31%) : 42.8kg(CO2)/톤
 - 소각시설(음식쓰레기 총량의 4%) : 378.1kg(CO2)/톤

Cf.: 전기식 건조 감량기의 CO₂ 발생량: 151.37kg(CO₂)/톤(f/w)



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식별 에너지 소요량 비교표

현재의 처리 방식

전기식 건조 감량 방식

1. CO, 발생량

(1) 분리 배출 단계 : 없음

(2) 수집 운반 단계(경유차량으로 운송): 88.07kg CO₂/톤.km

- ① 기준: 20톤 트럭으로 평균 왕복 100km(1톤당 5km) 그런데 한국음식쓰레기를 수거 후 중간 처리업체까지의 수집 운반거리는 최소 왕복 100km이며 최대 20톤의 음식 쓰레기를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산함.
- ② 따라서 20톤의 음식쓰레기가 최소 $100km(왕복 운송이며 압축/파쇄 후 재처리장의 운송을 생략함)를 운행하므로, 음식쓰레기 1톤당으로는 <math>5km씩 운송되므로 수집 운반 단계 에 서 는 88.07kg(<math>CO_2$)/ 톤 .km X 5km/ 톤 = $440.35kg(CO_2)$ /톤(f/w)가 발생됨.
 - 440.35kg(CO₂)/톤(f/w)
 - ※ 이를 IPCC G/L에 의한 환산표에 의해 경유 1 liter당2.58kg(CO₂)가 발생되므로,

의 연료 소모임.

- ※ 참고로 IPCC G/L에 의해 에너지 공단에서 만든 환산표 http://CO2.kemco.or.kr/toe/toe.aspx참조
- (3) 처리단계(모두 전기로 설비를 운전함)
 - ① 중간처리 시설 : 16.1kg CO₂/톤(f/w)
 - ② 하수처리장 : 244.7kg CO₂/톤(f/w) X 65%= 159.06kg CO₂ ※ 음식쓰레기의 압축 후 65%가 탈리액으로 하수처리 함
 - ③ 퇴비화 시설 : 42.8kg CO₂/톤(f/w) X 31% = 13.27kg CO₂ ※ 음식쓰레기의 압축 후 31%가 고형물(함수율 72%)로 축분/톱밥과 섞어 비료화 함.
 - ④ 소각시설: 378.1kg(CO₂) X 4%=15.12kg(CO₂)/톤(f/w)

소계: 203.55kg CO₂/톤(f/w)

합계 : ① 경유 : 440.35kg(CO₂)/톤(f/w) ② 전기 : 203.55kg(CO₂)/톤(f/w)

합계: 643.9(CO₂)/톤(f/w)

1. CO₂ 발생량

(1) 분리 배출 단계: 151.37kg CO₂/톤 (f/w)

(2) 수집 운반 단계 : 없음

합계: 151.37kg CO₂/톤(f/w)

Cf.: 현재 처리방식에 의해 음식쓰레기 1톤당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의 양 643.9(CO₂)/톤(f/w)는 전기감량식 대비 4.25배임.(즉 전기식은 현재 방식의 23.5% 수준임)

※ 참고사항 [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비교]

- 전제 ① 한국은 아직 IPCC의 G/L에 의한 $\mathrm{CO_2}$ 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향후 한국형 $\mathrm{CO_2}$ 배출 발생량을 계산 할 것이라 함.
 - ② IPCC의 G/L(2006년 제정)의 주축이 EU이며, EU의 프랑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98%이나, 한국은 전기 생산의 주류가 석탄, 경유, CNG, 원자력, 수력 순이기 때문에 전기 소비에 대한 IPCC의 CO_2 발생 G/L은 한국보다 매우 낮으므로, 한국에서는 이를 보정 할 필요가 있음.
- 계산식 ① 따라서 IPCC G/L에 의한 전기 1 kW당 CO_2 발생지수인 0.47kg(CO_2)/kWh는 상당히 보정되어 약 2배정도 보정되어 약 1kg(CO_2)/kWh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 - ② 이 계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로 예상됨.

현재의 처리 방식

① 경유 : 171 liter/톤(f/w) [=1,790 kWh/톤(f/w)에 해당]

+ ② 전기: 1,076 kWh/톤(f/w) 합계: 2,866 kWh/톤(f/w)

전기식 건조 감량 방식

① 전기: 850 kWh/톤(f/w) (현재 처리방식대비 30%임)

3.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식별 처리비용 비교

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식별 처리비용 비교표

현재의 처리 방식

(수집→운반→중간처리장→하폐수처리장/퇴비장)

- 1. 수집/운반 비용 : 60,000원/톤
- 2. 중간처리비용
 - (1) 압축/파쇄/고액분리: 67,400 원/톤 (인건비, 설비 운영비, 이윤 포함)
 - (2) 고액 분리 후 처리비
 - ① 고형물(총량의 31%) : 18,600원(60,000 원/톤)
 - ② 탈리액(총량의 65%) : 52,000원(80,000 원/톤)
 - ③ 협잡물(총량의 4%) : 2,000원(50,000원/ 톤)

소계: 72,600 원/톤

합계: 140,000 원/톤

총계: 200,000 원/톤

전기식 건조 감량 방식

- **1. 전기료**(운전비 포함) 800kWh/톤 X 100 원/kWh = 80,000 원/톤(f/w)
- 2. 건조물 운반비(건조 후 18%로 감량됨, 감량율 82%)50,000 원/톤 X 18% → 9,000 원/톤(f/w)
- 3. 건조된 음식쓰레기의 사료 또는 비료 판매수익(18%
 중 1% P는 소각)
 60,000 원/톤 X 17/18% → 10,200 원/톤(f/w)
- 4. 감량기의 감가상각비 및 이윤 등 : 121,200원/톤(f/w) 합계: 200,000 원/톤
- ※ 전기 대신 LNG(도시가스)를 연료로 사용 시 운전비는 40,000 원/톤으로 됨.(현재 LNG(9,500kcal/Nm3 ≒ 11kWh)의 가격은 522 원 임(= 47.5 원/kWh에 해당))
 - ※ RFID 및 전자저울, Internet 기능 등으로 100kWh/ 톤 정도 추가 됨.
- ★★ 음식건조물을 연료로 사용허가가 될 경우의 비용
- ① 구동부 전기 소비량 : 80kWh/톤[=8,000원/톤(f/w)]
- ② **건조연료**(음식건조물): 180kg/톤[=18,000원/톤 (f/w)]
- ③ **보조연료**(필요시, wood pellet) : 20kg/톤[= 10,000 원/톤(f/w)]
- ④ **효과** : (i) 전기 절감 : 현재의 90% 이상 절감
 - (ii) 음식 건조물 매립 시 처리비용 절감 : 140,000 원/톤
 - (iii) 이론적으로 연간 5,000,000톤의 음식쓰레기를 건조방식으로 처리하고, 건조물을 연료로 허가 하였을 경우의 연간 처리비 :
 - 전기료 : 5,000,000톤/년 X 80kWh/톤 X 100 원/kWh = 400 억원/년
 - 보조연료 : 500만톤/년 X 20kg/톤 X 200 원 /kg = 200 억원

합계: 600 억원/년

현재 1년 예산 1 조원의 6%(연간 9,4000 억원 절감)



4.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

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표

항 목	현재의 처리 방식 (수집→운반→중간처리장→하폐수처리장/퇴비장)	전기식 건조 감량 방식
<i>1.</i> 국민의 편익성	불편함 (1) 봉투에 담아온 음식쓰레기를 종량제통에 음식물을 버리는 봉투는 분리하는 과정에서의 악취, 오물 오염 등. (2) 1주에 2회 정도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하므로, 악취와 해충/야생동물 출현.	편 리함 (1) 봉투째 투입하므로 악취/오물 오염이 없음. (2) 음식쓰레기 발생 현장에서 처리가 완료되어 악취와 해충/야생동물의 출현이 없음.
<i>2.</i> 환경성	비 환경적 요소가 많음 (1) 2013년 해양투기 금지 이후 현재까지 도 불법 육상투기가 만영되어 있음. (2) 탈리액의 유기물 농도가 하수의 1,000배이므로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많고, 따라서 때로는 고농도 유기물을 하천에 방류하여 2차 오염 가능. (3) 우천시 불법으로 하천 방류 (4) 폐기물관리법상 음식쓰레기는 80℃이상의 온도에서 30분이상 가열하여야 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부패된 음식쓰레기로 개, 닭, 오리 등에 식이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야생조류들을 유인하여,	환경친화적임 (1) 음식쓰레기 발생장소에서 완전하게 육상처리 됨.
<i>3.</i> 수집/운반	불편함 (1) 운송비/인건비 절감을 위해 통상 20 톤 트럭의 음식쓰레기 용량이 되는 시점(1주에 2회정도)에 수집하므로 국민들의 악취/야생동물 출현 등의 불편이 많음. (2) 공동주택은 물론 주택의 경우도 악취 차량이 골목 구석을 다녀야 하므로 악취/발생은 물론 고통유발	문제가 전혀 없음 (1) 음식쓰레기 발생 현장으로 주민 스스로 운반하므로 수집/운반 자체가 없음. (2) 다만 건조물은 무취이며 봉인된 보관함에 다 차면 즉시 차량으로 운반하므로 문제가 없음.



4.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

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식별 장단점 비교표

항 목

현재의 처리 방식

(수집→운반→중간처리장→하폐수처리장/퇴비장)

전기식 건조 감량 방식

보통

- (1) 육상처리비가 계속 상승되어 국가 전 체적으로 연간 500만톤의 처리비용 이 현재는 약 1조 2천억으로 추산되 어 1톤당 240,000원을 육박함.
- (2) 따라서 종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던 처리비(처리비의 평균 60% 수준)를 국민에게 부담시켜, 많은 지자체가 종전(60원/kg)보다 약 3매(200원/kg) 증가 추세임

보통 또는 매우 낮음

- (1) 현재는 건조감량기기의 보급수량이 적어서 기계 생산 단가가 높아 처리 비용(전기료)와 기기류의 5년간의 감 가상각비를 계산 할 때 현재 처리방 식과 같은 수준임. 지자체에 따라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함.
- (2) 그러나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법규에 규정한 음식건조물에 대한 잘못된 규정(과학적, 논리적근거가 전혀 없음) ①건조물도 폐기물임 ②건조물을 연료로 사용 못함.을 개정할 경우 현재의 처리비보다매우 낮아지고
- (3) 음식건조물을 비용(140,000원/톤)을 들여서 버리고, 매립장에서 다시 CO₂/CH₄라는 GHG를 발생시키는 우 둔한 정책을 바꾸면 막대한 에너지의 절감과 연간 처리비(이론적으로 연간 500만톤의 음식쓰레기 처리비 약 1조 원을 600억원으로 낮춰 연간 9,500억 원)을 절감 할 수 있음

4. 비용

모든 처리용량이 가능

- (1) 일괄 수거방식이므로 모든 용량의 음 식쓰레기를 같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.
- (2) 그러나 중소도시의 개인주택은 육상 1주일에 1회 수거하는 불편이 있음.

세분화한 기기로 처리 가능

- (1) 감량화 사업장/공동주택은 산업용 건 조감량기로,
- (2) 일반 가정은 가정용 건조 감량기로,
- (3) 소형 식당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소 형 산업용 감량기기로 가능.
- (4) 적은 용량의 감량기기라도 필요한 성 능은 전부 있어야 하므로, 적은 용량 일수록 음식쓰레기 단위당 가격은 상 승됨.
- (5)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현재 방식이 필요함. 다만 이경우, 수집 운반차량이 현재로 1주에 1회 정도 오는 곳은 2주에 1회 정도 수거하게 되어 또 다른 주민 불편이 예상됨.

5. 처리용량

5. 최적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안 제안

1) 건조 감량기의 확대

- (1) 처리비용상으로도 현재의 처리방식과 같은 수준으로 경제성이 있고
- (2) 악취 등 환경성이 현재 처리방식보다 훨씬 우수하며,
- (3) 음식쓰레기를 버리는 국민들의 편익성(악취/오물)이 훨씬 높고,
- (4) 환경성에서도 현재 처리방식보다 훨씬 우수하므로 건조 감량기의 설치를 국가 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익할 것임.
- (5) 확대할 대상은,
 - ① 고층 APT(전국의 약 50,000개동)
 - ② 감량화 사업장(전국 약 58,000개소)
- 2) 음식건조물에 대한 비과학적이고, 비논리적인 다음 규제를 즉시 철폐하고 자원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함 (첨부 3 : 법령 수정 제안)
 - (1) 음식건조물(함수율 15%이하)은 사료/비료/연료의 원료이므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개정
 - (2) 음식건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"불가 "사항을 삭제 ※ 지난 수년간 "앞으로 장기적인 과제"로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일체의 진전이 없고, 환경부가 주제한 공청회 등은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논의한 적은 없고, 비전문가인 시민단체 또는 전공이 아닌 교수들의 허황된 토론만 있어 왔음.
 - (3) 나아가 건조 감량기를 사료/비료/연료 생산기기로 인정하는 규정의 재개

3) 제안의 부대효과

- (1) 환경성 개선
- (2) 국민의 편익성 개선
- (3) 비용(국가 예산) 절감
- (4) 신산업에 의한 고용 대폭 증가

